

‘경복궁 담장 낙서 훼손’ 실행 가능한가?

경찰, 문화재보호법·재물손괴 혐의 적용 방침 2017년 ‘언양읍성 낙서’ 남성 징역 2년 선고 법조계 “징역형 가능”... ‘문화재 여부’가 쟁점



문화재청 작업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이 ‘경복궁 담장 낙서 훼손’ 사건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피의자들에게 실행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18일) 종로구 경복궁 담벽을 훼손한 피의자 20대 남성 A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6시간 동안 조사했다.

A씨는 첫 번째 담장 훼손 사건의 모방범죄를 지난 17일 저지른 당사자로 전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첫 번째 ‘낙서 테러’ 피의자도 남성 1명과 여성 1명 등 2명으로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신원이 거의 특정됐

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들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는 피의자들에게 실행이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는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정 형에 따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

겠지만 분명히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외벽의 낙서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는 일반인의 손괴나 훼손에 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 형법의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낙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만일 담벽에 그라피티를 그렸다면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예술적 행위라는 점에서 양형 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사건은 의미 없는 단순 낙서 혹은 특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행위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범행”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 조항에 따라 실행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지난 2017년 9월 40대 남성이 사적 제153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등에 붉은 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다.

이 남성은 성벽 약 70m 구간에 육설과 미국을 비하하는 문구 등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경복궁 담장이 ‘복원 건축물’인 만큼 원본 그대로를 유지하는 문화재와는 그 가치가 다르다는 해석도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담벽이 가진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복원된 건축물인 고궁 담벽에도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로 볼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향후 피의자에게 복구 비용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경주 문화재청 경복궁 관리소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재보호법은 지정 문화유산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하면 원상 복구를 명령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슬비기자



순천경찰, 외국인 유학생 자물방범대 정성치안 활동

순천경찰서는 최근 순천대 외국인 유학생을 주축으로 외국인 밀집 주택가 및 식당을 돌며 마약, 이상동기 범죄예방과 국내 체류증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가오는 정성치안 순찰 활동을 전개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장흥경찰, 안보자문협의회 회의 및 참여치안 설명회 개최

장흥경찰에서는 지난 18일 본관 천관마루에서 2023년 하반기 안보자문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장흥=김도영기자



보성경찰, 치매 노인 등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성경찰서는 지난 18일 경찰서에서 박재순 ㈜보성교통 대표이사, 김태영 드론농부협동조합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장애인·치매노인 등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성=김덕순기자



고흥 풍양파출소, 이장단 대상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

고흥경찰서 교통과와 풍양파출소에서는 지난 19일 풍양면 이장단과 부녀회장단 등 약 80여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과 노인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주 동부소방, 12월 중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 18일 오후 2시에 전동시장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연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완도소방 생활안전순찰대, 연말연시 화재취약시기 화재예방활동

완도소방서는 15일 119생활안전순찰대가 소안도, 금일읍을 방문하여 독거노인 가정 등 화재취약가구 대상으로 연말연시 화재취약시기 화재예방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일벌백계는 새빨간 거짓말” 광주 북구의회서 검토부 ‘물징계’ 성토

“총체적 부실 책임이 고작 감봉 징계...제식구 감싸기에 구민 기만”

잇단 선수 성비위를 계기로 드러난 광주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내 각종 부실 운영 파문의 책임 당사자인 감독 등에 대한 ‘달여주기 징계’와 관련, 의회에서도 날선 비판이 나왔다.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은 19일 제290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전날 열린 북구청 검도부 운영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검도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18일부터 61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진 검도부 운영에 대한 총체적 부실 책임이 고작 감봉 2개월, 코치 감봉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버리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최 의원은 “쇄신의 의지는 온데간데 없이 (위원으로 참여한) 의원들을 둘러리 세우고 이미 서로 짜맞추기라도 한 듯 경계로 마무리해버렸다”며 “허탈함을 넘어 극도의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검도부 선수 성폭행 사건이 처음 밝혀질 당시 해체까지 검토하셨던 구청장은 아이러니하게도 행정사무조사가 끝난 뒤 180도 바뀌었다. 2019년 허위 전지훈련 적발 이후 4년 만에 재실시된 이번 행정사무조사였지만 북

구청의 ‘배주기식 제식구 감싸기’로 인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또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을 일벌백계 하겠다”던 검토부 단장 부구청장 명의의 사과문과 쇠신 약속은 43만 북구 주민을 상대로 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며 “과연 감봉 1·2개월 조치가 엄한 벌이고 일벌백계에 합당하다고 보느냐. 도대체 주민들과 북구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이냐”라고 맹비판했다.

최 의원은 “언론을 통해 주민들에게 한 약속마저 손바닥 뒤집듯 뒤엎는 북구 행정은 최소한의 책임·윤리의식이 사라진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위선과 오만함의 끝을 달리고 있음을 자각하고 부끄러움을 깨닫기 바란다”며 “말뿐인 강도 높은 쇠신 대책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도 없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구청은 주민들이 고용한 관리인일 뿐이다. 관리를 잘못하면 해고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구청은 주민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검도부 관리감독 잘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올해 8월 북구 검도부에서는 당시 현직 선수 2명이 성범죄 사실을 1~2년간 숨긴 사실이 줄줄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감독·코치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라 구청 감사·의회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부실 운영 민낯이 확인됐다.

담당부서가 감독에 손을 댄고, 감독이 기본적인 훈련일지 작성·관리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관리 공백을 비집고 종목 단체인 시검도회가 조례까지 어겨가며 임용·용품 계약 등에 전횡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날 열린 검도부 운영위원회는 감독과 코치의 소명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각각 감봉 2개월과 감봉 1개월 징계에 그쳤다.

당초 담당부서가 고수했던 감독 해임을 추진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강도 높은 쇠신을 약속했던 북구청의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 오히려 의회 조사로 확인된 제자 임용·용품 계약 의혹 등에 대해서는 추가 규명 없이 ‘단순 선수단 관리 소홀’만 놓고 징계를 의결, 또다시 심각한 도덕 불감증만 드러냈다.

수개월간 파문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배경을 두고 일각에선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이 면죄부가 됐다’나, ‘또다시 시검도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다’, ‘책임자 징계 없이 쇠신이 되겠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 등 말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오유나기자

‘병원→유흥업소→이선균’...경찰, 마약 건넨 의사에 영장 재신청

경찰, 전남 지드래곤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경찰이 강남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인천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후 2시30분께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께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A씨 구속의) 사유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다름의 여지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 관계 등에 비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통해 이선균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마약을 제공했고, 이 마약이 이씨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의 서울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씨 또한 최근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나에게) 뭔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하는 강남의 한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 마약수사계 수사관들은 A씨의 휴대전화와 그가 처방한 의료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올해 간단한 시술에 프로포폴을 과다처방한 사례로 여러 차례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인천경찰청은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 지드래곤(35·권지용)과 이씨 등 7명을 입건했고, 3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벌였다. 그러나 권씨의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전날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했다.

서선욱기자